

## 동 반 성 장

### ■ 차 례 ■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3. 중앙과 지방
4. 노와 사
5. 도시와 농촌
6. 대기업과 중소기업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통합

제가 루즈벨트 시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가 정의와 가치의 충돌의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다른 점에 있어서 가치의 충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는 이런 부당한 부분과 관련 이미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로 저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노동자 편이어서 기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려하

는 신문의 보도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있어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통합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우리 스스로 파괴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56%의 비정규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 56%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여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정규직과 형편없이 다르고, 중간에서 용역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그 용역업자들은 골프장 다니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 4차회의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서 2003. 1. 22)

#### □ 현재 노동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내 놓아야

우리가 10가지 국정과제를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2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2개를 마저 챙겼습니다. 하나는 노사관계고 하나는 농민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사문제를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노사문제, 농민문제, 교육문제 이 세 가지만 잘 풀리면 큰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동관계 법령의 개별 근로관계라든지 집단적 근로관계 부분에 있어서 현실 적용결과가 아니고 제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점을 분석하거나 측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노동정책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 자체가 갖는 세계적인 기준 대비 수준 그것도 알아 놓고 그 규정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본 결과로서의 수준이 비교된 자료들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추진전략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 □ 노동운동은 국민적 관심으로 시야를 넓혀서 해결해야

대기업 노조문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이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노동자들만의 권익이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익까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울러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그 수준을 갖추었을 때 정치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지금 노동운동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고한 대기업 노조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느껴지는 주장들이 더러 있어서 전체적인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점차 노사문화를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국가적 관점을, 국민적 관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대전·충남지역에서 2003. 2. 5)

##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 □ 양극화 문제는 지난 10년 간 확대돼

우리 고민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격차입니다. 제가 기술혁신을 내세웠는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술격차, 그 차이를 줄이려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가 있고, 작은 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아주 낮습니다. 소득 그래프로 그리면 가운데 중간치가 낮고 양쪽은 높습니다. 장구 반쪽을 자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가 부족한 것은 신용불량자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배로 극복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교육, 연수, 훈련, 노동기회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려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LA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1. 15)

#### □ 발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발전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에 서있는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자로 얘기하더라도 일류 대기업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 9. 6)

#### □ 양극화 문제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해야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 8. 30)

#### □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에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 가는 경제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 모델, 이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상생의 경제모델’을 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면 서비스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전략을 21세기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략으로 채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규제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또 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2004. 6. 18)

### 3. 중앙과 지방

#### □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것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수도권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정책은 지방만 잘 되고 수도권 손해 보라는 정책 아닙니다. 수도권에 지금과 같은 생활환경, 문화환경, 도시환경을 갖고는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운영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 새로운 전

략 세워야 하는데, 좀더 분산하고 공간을 넓게 해 과밀 줄이고 보다 더 수준 있고 쾌적한 도시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충청도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도권과 경쟁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복도시라는 말을 실감나 하지 않는데, 저는 행복도시가 막상 만들어 지고 나면 그 도시의 이름을 행복도시로 붙이는 데 조금도 서먹하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정책 성과보고회에서 2006. 7. 12)

## □ 참여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배분 비율 역전

탄력세 말고 특별세도 어렵고,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간 자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자원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주 재원이 중요할 지 모르지만 그 점은 중앙정부에 안 맡기곤 다른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유럽에선 EU 국가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뜻에서 후발국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대신 참여정부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배분이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정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쓰다가 이제는 지방이 절반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무더기로 주고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이전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정 이전이라는 것은 용도를 정해 주고 매칭펀드 해서 주지만 그 밖에는 못 주겠다는 것인데, 용도를 정해서 주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좋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방 균형발전 제도도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한 뒤에 지방 재정 규모 전체도 커졌고, 자주 재정, 포괄 이전 부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국정보고회에서 2007. 7. 12)

#### □ 수도권과 지방 격차 그대로 두고 통합된 국가 갈 수 없어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가 서로 달라도 수백 억 달러씩의 돈을, 수천 억을 건어서 수백억 달러씩을. 지금 유로지요. 유로로 저개발 국가에, 그 유럽 중에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고 더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연간 300억 달러 썩의 지원을 작년까지 받아 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처럼 용단을 내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 이것을 방치해 놓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이익이 되고, 가까이 보면 이익인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분산과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산업혁명, 수백 년간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도 균형발전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7. 20)

#### □ 행정수도, 충청권의 발전 넘어 국민통합의 결정적 계기 돼야

혼자서 잘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난해서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체할 것인가, 그들이 조성하는 불안 때문에 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딱 30년만 내다보면 모든 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행정 수도건설을 30년간 지

체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수십 년간의 실천 과정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자유와 평등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마음껏 지체시켜 놓고,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라 놓고, 중앙과 수도를 또 갈라 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단지 충청권의 발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부여해서 약간 우리 경제가 좀 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고도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균형발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7. 20)

## 4. 노와 사

### □ 노·사·정 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필요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태이고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큼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서민대책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반면 요구하면서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대화하고 싶은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음은 안 되고 현금을 요구합니다. 노동단체는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 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 □ 노사간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국가권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주체의 역량이 늘고 있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와 타협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일부에서 걱정하지만 성의를 갖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며,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다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충실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하나씩 채워질 것입니다.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사관계 안정에도 많은 기여가 되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를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고 보완·발전시켜 더 큰 협약을 이루어 줄 것으로 노사정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 2. 10)

## □ 노동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되어야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과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사회의 노사문화가 상호존중과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합의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와 합의의 생산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역할

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24)

## □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길

우리가 ‘연구·개발’하면 전부 연구소 안에서의 연구·개발, 첨단 기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거기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이거든요. 박사들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 보겠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혁신을 해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지금까지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기발한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정말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이런 투쟁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라, 우리 편으로.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mbn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통과…제도 정비 마무리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하질 못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냈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이제 이번에,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임기 초반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아직까지 별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아직도 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mbn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5. 도시와 농촌

### □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해야

도·농상생형 국토공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혁신도시, 거점도시, 또는 농촌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심도시, 이런 개념들을 함께 만들어서 전 국토를 우리 국민들이 좀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시 조성하는 계획들을 이 기회에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가는 새로운 국토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지방의 발전계획과 또 무관하지 않은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새로운 공동체로,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국토로 재편성

할 것입니다.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에서 2006. 9. 13)

#### □ 농촌은 도·농 상생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살려 나가야

지금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농업인들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키워 나가고 지켜야 할 분야는 꼭 지키겠습니다. 영세·고령 농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것은 물론, 개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

농촌을 되살리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복원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달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도전합시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제11회 농업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10)

#### □ 도시와 농촌 교류하며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 가능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존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12)

## 6. 대기업과 중소기업

###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필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 소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처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2004. 7. 7)

#### □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30년 동안 총론적으로 한다고 노래만 부르는 결과 없는 정책은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게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만으로 한계가 있고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전략을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꿉시다. 이미 대기업이 상당 부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함께 해 나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5. 5. 17)

중소기업 정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동반성장 경제정책을 표방하였으며, 동반성장 경제의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 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과 계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정책신뢰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할 때 시스템적으로 상생협력이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검증된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사회문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상생협력으로 자기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채택하게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고 역동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공모델은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성공 모델이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상생협력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2005. 7. 5)

## □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가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을 내고,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대기업 제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한마당에서 당당히

앞서 가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 2005. 5. 16)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항상 중소기업 쪽에 불리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중소기업에 모여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하는 영양가 있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 없이 동정이나 편들어 주기 같은 것은 잔뜩 써 놓고도 실속 있는 정책으로 가면 별로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강의 구조를 보고 중소기업정책을 해 봤더니 중소기업들을 전혀 모르고 상관없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이상한 것이 있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200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조사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 개 기업을 전수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도 다 정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정책도 바꾸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도 힘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뛰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 정책의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데 한 10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항상 열어 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전해 들었던 말이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또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제가 꼭 당부하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는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앞장서서 끌어드릴 것은 끌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이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과거에는 복지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바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는 통합적 논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서가 나와 있고, 또한 사회투자전략, 사회문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책을 보면 두 개 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동시에, 동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책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의 원리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 제도가 있다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시대 대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로 거둘 수 없고, 있는 예산 최대한 아껴 써 보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간에, 지출 분야 간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서 2006. 4. 22)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 복지와 노동 등 사회, 사회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0%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예산의.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7~8% 수준, 우리 예산을 8% 구조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8% 정도 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미국에 있어서 지출 예산의 52%가 이 분야의 비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의 52%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비용이지요. 우리는 28%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 정책)에서 2007. 3. 8)

##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 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배분에 대해선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차원에서도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선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 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지출을 잘 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

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 □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 역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소위 사회투자, 함께 가는 투자,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나 나가서 걷게 안 해 준다고 의사 먹살을 잡아 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도 고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